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 30 | 통권 제14호(2012-02) |

201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2년 노사관계 전망

[요약]

- 2011년에는 파업발생건수,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등의 노사관계 지표들이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정규직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영역에서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다른 한편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희망버스 투쟁, 대학교 환경미화용역업체 노조원들의 투쟁 등 노동시장 양극화의 그늘에서 새로운 갈등요인과 비정형적인 투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7월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500여 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지형이 형성되고 있음.
- 2012년에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나타나고,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참여로 인한 노동계 출신의 국회 진출과 함께, 노사관계 이슈의 정치쟁점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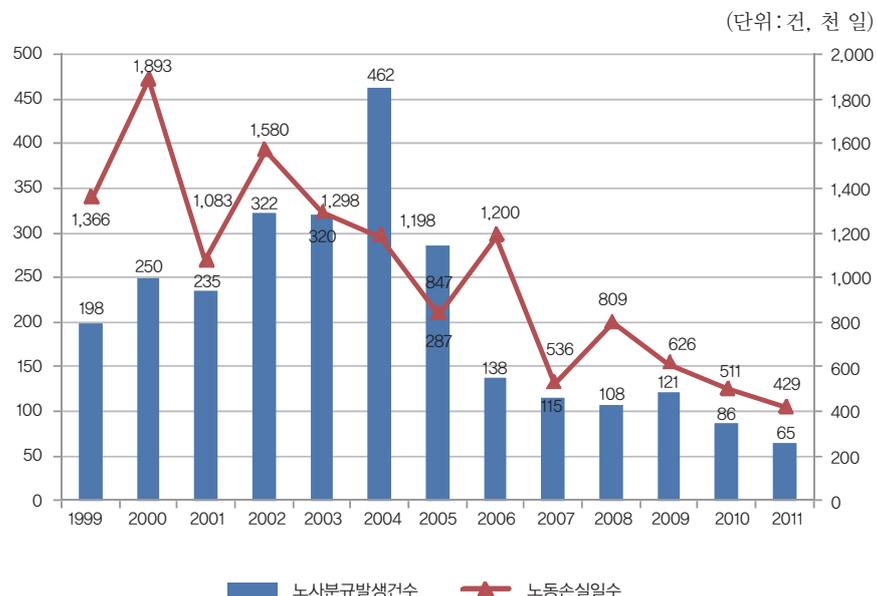
2011년 노사관계 평가

- 실질임금 하락과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로 2010년보다 약간 높았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하락하였음.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71만 8천 원(2011년 9월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3.5% 줄어들어 근로자들의 실제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00년대 이후 격차가 더 커지는 추세를 보여왔고, 2011년에도 큰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대학교 환경미화용역노조 투쟁 등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삼중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였음.

- 파업발생건수 및 노동손실일수 감소 추세
- 2011년 파업발생건수는 65건으로 1987년 이후 가장 적었고,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42만 9천 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근로자 1천 명당 노동손실일수가 24.7일로 OECD 국가 평균(2008년 기준 26.8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업종에서의 무파업 타결, 금속노조에서의 산별노조파업으로 인해 노동

〈그림 1〉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 노동손실일수



손실일수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노사 관계 안정화 추세가 나타남.

○ 파업발생 시 파업지속일수는 2011년 29.8일로 201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파업지속일수가 줄어든 것은 노사분쟁이 예전보다 빠르게 해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파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분쟁이 장기화되는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새로운 투쟁 양상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시작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타워크레인 농성을 계기로 노동·시민단체, 문화예술인들까지 참여하는 ‘희망버스’라는 새로운 투쟁양상이 나타남.

- 2011년 2월 한진중공업에서 170여 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발표하자 김진숙 지도위원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고, 여기에 몇몇 문화예술인들이 투쟁지지 의사를 밝히고, 송경동 시인 등이 희망버스 투쟁을 제안하면서 다섯 차례 희망버스 투쟁이 전개됨.

- 희망버스 투쟁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리해고자 조기 복직을 약속함.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희망버스 투쟁은 정규직 노조운동의 틀과 투쟁양태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사회갈등 양상으로 전개됨.

- 희망버스 투쟁은 노조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됨.

〈그림 2〉 연도별 파업지속일수



- 투쟁이 확산되는 방식도 기존의 노조 조직이 아니라 SNS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소식이 전파되고, 공감을 얻으면서 투쟁이 조직되는 양상이 나타남.

■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노사관계 지형 변화

○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으로 600여 개의 복수노조가 신설되는 등 복수노조 시대가 열림.

-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수는 매년 150~200개 정도씩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음.

-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기존노조 상급단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분화한 복수노조가 많지만 버스·택시 등 운수업종을 제외하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더 많음.

- 신설된 복수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양대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14%밖에 되지 않고, 86%는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아 복수노조 시대에 미가맹 노조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음.

○ 복수노조 시대에 노조 조직률은 분할형 복수노조가 많은 관계로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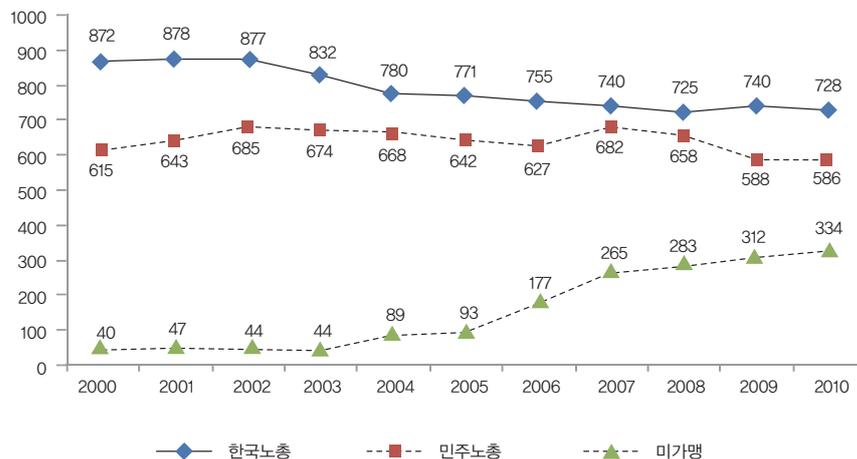
- 2011년 말까지 신설된 복수노조 중 조합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노조가 42%를 차지해 실제 노조 조직률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양대노총과 정부의 노정갈등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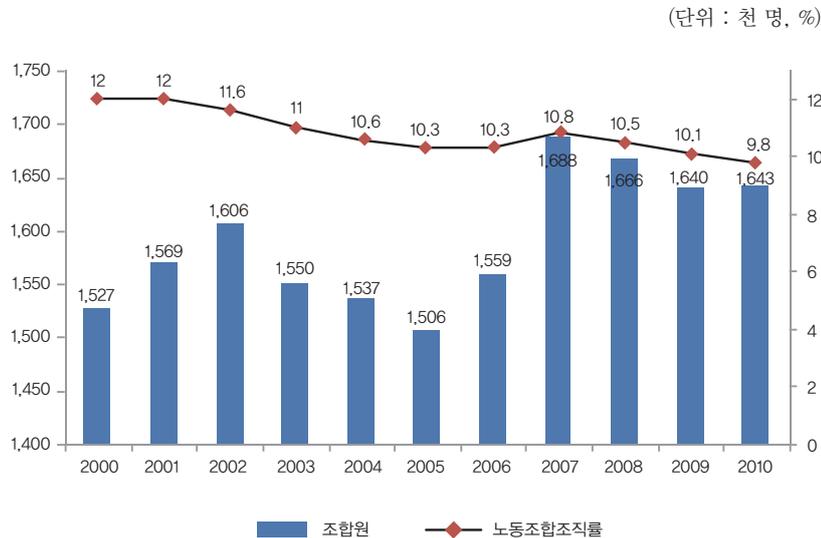
○ 2011년 초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 체

〈그림 3〉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그림 4〉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



제 출범 이후 MB 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동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수위가 높아졌음.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하여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노동법 개정 요구와 정부의 노동정책 비판에 나서면서 노정 갈등은 심화되었음.
- 한국노총은 2011년 12월에 출범한 통합민주당 창당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정부여당과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함.

2012년 노사관계 전망

■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노사갈등

- 유럽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기업

의 구조조정 등 고용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경기침체에 더 민감해 구조조정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대기업 구조조정은 노사갈등이 극심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2012년에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치의 계절, 노동조합의 선거참여 결과 '변수'

- 2012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참여가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노동조합의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노총의

〈표 1〉 2012년 경제성장률 및 소비증가율 전망치

	경제성장률	소비증가율
기획재정부	3.7%	3.1%
한국은행	3.7%	3.2%
삼성경제연구소	3.6%	2.5%
LG 경제연구원	3.4%	2.9%
한국경제연구원	3.5%	2.6%

민주통합당 참여와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을 통한 선거 참여임.

- 한국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진출하고, 4월 총선에서 다수의 후보 출마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나서고 있음.
-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내에서의 총선후보 공천과정에서 민주노총 출신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총선에서 노동계 후보가 몇 명이나 국회에 진출하는지가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영향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양대노총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당원 가입 등 정당활동 참여와 함께 총선 공약에 노동조합의 정치적 요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서 노동이슈의 정치쟁점화 현상 등 노동정치 활성화 여부가 주목됨.

- 한국노총은 예전의 상층부 중심의 정치 참여에서 벗어나 민주통합당 창당과정에서 선거인단 참여 및 당원 가입, 노동·복지정책 공약 준비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 민주노총도 통합진보당에의 당원 가입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추천권 확보, 정책공약 반영 등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과 같은 노사관계 쟁점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복수노조 시대의 노동조합 운동 변화

○ 2012년 복수노조 법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노동조합 설립 추세는 점차 하향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됨.

-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가 201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상반기에도 신규 노조 설립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2011년 7~8월 매일 10개 정도의 노조가 설립되던 추세에서 12월에는 매일 1개 남짓한 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2012년에 복수노조 설립 추세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은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여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나타나면서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제도 틀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복수노조 법시행이 2011년 7월이어서 2012년에 복수노조 시대의 첫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사업장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인지, 사용자 동의를 통해 복수노조 간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지, 복수노조들 사이에 교섭대표단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 관행이 본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 양극화와 비정규직 사회정치적 쟁점 부상
- 2012년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심화 문제가 주요한 노사관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점차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2012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 억제, 정규직 업무의 용역 전환, 비정규직 인력 감축 등에 나선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라서 비정규직 관련 이슈들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11년 12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하면서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또한 공공부문에 고용공시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에서 용역을 사용할 경우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음.
 - 노동계와 비정규직 단체들은 더 적극적인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2012년에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근로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편 추진성과 '관심'
- 2012년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연계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 규제와 교대제 개편에 관련한 정책이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고용 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고, 그만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혁해서 한편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 문제는 이

미 2011년 말 정부에서 현대차의 초과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조치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임.

- 현대차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 및 주간 2교대제 전환 움직임은 자동차산업 전체의 근로시간 관행에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에 근로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능력 제고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이성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musedori@kli.re.kr / 02-3775-5545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